

日 골프여행 비용 요구 김영주, 수사대상이다.

“오염수 인질극 그만하라”는 어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해산물 먹을 바엔 X을 먹겠다”는 식의 오염수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홋카이도 단체 골프여행 계획을 위해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홋카이도는 한국인이 많지 않아 골프를 칠 수 있다”며 맛집과 쇼핑을 언급했고, 김 의원은 “3박 4일 일정으로 홋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고 지인에게 전송했다.

죽창가를 외치고 오염수 괴담을 퍼나르며 반일감정을 자극해 온 민주당이다. “핵 폐수” “방사능 우력” 등 괴담을 생산해 국민 불안을 조장해왔다. 이로 인해 천일염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어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전문가라고 내세운 인사는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인 IAEA가 민주당 괴담에 동조하지 않자 “IAEA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계는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명확한 과학적 사실에는 눈을 감고, 과학계의 토론회 제안도 거부한 채 괴담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의 문자 내역을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홋카이도 가이드’는 문자의 수신 상대방인 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이드인 지인에게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는 내용은 비용을 부담하는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음을 추정케 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수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2023. 7.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